북-미 사전 '교감'… 전망 밝아

■ 오늘 개막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시공도면' 나올까

관계정상화 합의 구체화…불능화 방법·상응조치 난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시한 및 이행 계획을 담은 합의서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베이징에서 27일 개막하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불능화의 방법 규정, 불능화 및 신고의 이행 시한, 불능화 및 신고 이행에 맞춰 제공될 대북 중유 및 설비 지원 계획, 정치·안보적인 대북 상응 조치 등을 담은 합의문을 만드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의 설계도로 평가되고 2·13 합의가 그 '1단계 시공도면'이었다면 이번에 참가국들은 '2단계 시공도면' 작성을 시도하는 셈이다.

회담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달 초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연내 불능화와 신고를 이행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끝낸다는데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간 합의 사항을 6자회담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그것을 문서로 만드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문에 담느냐 등을 두고 북·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만약 북측이 '연내에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식의 명확한 약속을 원하더라도 미국은 미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력한다'는 수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이달 초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만 회담 합의문에 적절히 담아내기만 해도 1차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지만 연내 불능화·신고 이행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이번에 최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의 세부 계획까지 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불능화 방법의 경우 참가국들은 지난달 비핵화 실무회의와 최근 미·중·러 3개국 대표단의 방북 협의 등을 계기로 긍정적 논의 분위기 속에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을 마련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자급에서 이뤄진 조율이었던 만큼 6자회담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북한이 현재 마련된 불능화 방법을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와 10월2일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을 마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5일이라는 사실상 제한된 시간 안에 구체적 합의를 하려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참가국들은 불능화·신고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연내에 각각 이행한다는 식의 다소 모호한 합의만 우선 도출한 뒤 추후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하자는 식으로 회담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D-5 노대통령 준비 박차

방북 대국민 메시지 발표

개성공단 방문 생중계…군사분계선 도보 방북 유동적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대통령께서는 고향 성묘를 마치고 귀경한 뒤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숙독했다"면서 "안보실과 의전팀, 경호실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 앞서 청와대 본관 앞에서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내실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과는 달리 시민들의 환송행사 등 이벤트를 자제키로 하는 등 '조용히'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회담은 육로를 통해 방북하는 만큼 그 특별한 상징성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도보로 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 특수한 곳인데다 대통령이 노출될 경우 '민감한' 경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보 방북은 유동적이다.

이어 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개성에서 평양행 고속도로를 타게 될 때는 출근시간이어서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확정된 노 대통령의 평양에서의 공식 일정은 첫날 환영식에 이어 북측이 주재하는 만찬, 다음날인 3일 우리측이 답례 형식으로 제공하는 만찬, 마지막날인 4일 오전 참관지 방문과 귀환시 개성공단 방문 등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 "내일 중 확정할 것"이라며 "만약 관람하게 될 경우 첫날이며,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마지막날인 4일 오후 서울로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은 TV 생중계로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마음은 고향으로… 추석인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한 실향민이 망배단에 차려진 합동 차례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 후 미군 주둔에 김정일 위원장도 동조"

DJ 미국 방문 연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낮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 만났을 때 19세기말 조선 말엽에 중국·일본·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병탄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국권을 상실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만일 그때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망국의 서러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의외로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안도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 공동으로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큰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특별기고

기광서

2차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다음주(10월 2~4일)면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민족적 행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2000년 첫 정상회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돌아보면 이번 2차 회담 역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번 회담은 북한 핵 폐기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한 원인이 바로 핵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이 대남 무력사용보다는 대미 협상용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핵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북한의 최후 '카드'에 대한 소모적인 승강이로 우리가 얻어야 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 이후 시장 경제 영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으나 시장의 영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부문으로 자리하였다. 남한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성과 없이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기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굳이 몇 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강대국의 입장 변화에 의해 사실상 좌우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 민족이 대회의 주체로서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현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양 정상 간의 평화선언과 같은 협약은 향후 평화체제 구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남측 자본의 투자와 지원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일이다. 이는 동포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 경제력의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협력과 화해를 추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화 과정으로서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 민간교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언젠가 다가올 통일방안에 대비하여 매우 추상적인 기존의 통일방안을 진일보시키기 바란다. 바로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이야말로 남북관계의 수준을 현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립과 반목의 짐을 벗어 던지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부시 "북한은 야만정권" 또 비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을 벨로루시·시리아·이란 등과 함께 '야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거듭 지칭,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나설 것을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협정'이라면서 미 의회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모든 문명국가들은 독재정권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면서 "벨로루시·북한·시리아와 이란 등 야만정권들은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